

## 정부 추경 2,500억원 SOC 투자키로 (2004. 7. 5)

급랭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추경예산 2,500억원을 SOC사업에 투입하는 등 진작책이 마련된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예산 2,548억원을 투입, 철도망 확충과 치수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고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도 최대 8천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 시설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또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를 당초 1,300만평에서 1,800만평으로 500만평을 추가 공급하고 관리지역내 아파트 건설 면적기준도 30만<sup>m</sup><sup>2</sup>에서 10만<sup>m</sup><sup>2</sup>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충청권 신형정수도 후보지와 수도권 미니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수요진작책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투기대책을 하반기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SOC투자 확대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게된 것은 올들어 지난 4월까지 건설수주액이 25조 8,000억원으로 전년동기(26조 7,000억원) 대비 3.4% 감소한데다 향후 건설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건축허가면적도 전년동기보다 무려 25.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 레미콘 출하 6개월째 내리막 (2004. 7. 5)

올들어 수도권 레미콘 수요가 6개월째 감소, 아파트 등 건설경기 일감의 축소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3일 레미콘공업협회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중 레미콘 수급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소재 레미콘공장의 제품출하량은 526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줄었다. 수도권 레미콘 출하는 지난 1월 전년동기대비 15.7%의 감소율을 기록한데 이어 6개월 연속 내림

세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동안 수도권의 레미콘 총출하량은 2,662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 감소했다. 이는 아파트 등 민간주택건설 일감이 대폭 줄어든데 주로 기인한다. 이 기간동안 수도권의 민수 레미콘 출하량은 2,412만톤으로 작년 동기대비 9.4% 감소했다. 반면 관수는 250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9% 증가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동안 강우일은 14일로 지난해(23일)에 비해 9일이 줄어드는 등 건설현장과 레미콘가동을 위한 기상조건이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감소로 수도권 레미콘 공장의 평균 가동률이 대폭 줄었다"며 "수도권의 매일 평균 레미콘 출하량은 16만 3,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만 5,000톤에 비해 6.5% 떨어졌다"고 밝혔다.

## 주택협회, "주택수요 억제책 풀어야" (2004. 7. 7)

한국주택협회는 6일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에 중점을 둔 연착륙 방안이 최근 발표됐지만 주택경기를 연착륙시키려면 주택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이날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주택수요를 묶어둔 채 공급만 늘리고자 할 경우, 미분양 및 공급위축을 초래해 주택경기가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측은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제도의 지정단위구역을 동 또는 광역아파트단지로 세분화하고, 지정요건 해제시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을 직전월의 경우 1.5% 이상 상승에서 3% 이상으로, 직전 3개월간은 3% 이상 상승에서 5%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담보 신규대출시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려시멘트 골프장 사업 진출

(2004. 7. 16)

고려시멘트가 골프장 건설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사업다각화에 나섰다. 16일 고려시멘트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장성군과 골프장 건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골프장은 장성군 동화면 일원에 27홀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는데로 착공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주5일 근무 확산, 레저인구 증가 등 사회추세에 힘입어 골프장 사업이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설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레미콘사업에도 뛰어들어 이달초 연간 15만m<sup>3</sup> 규모의 레미콘회사를 인수해 자회사로 맞아들였다. 고려시멘트의 사업확장은 그동안 경영권을 둘러싼 회사내분을 마무리짓고 내놓은 것이어서 안정적인 사업성장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박홍래 대표이사는 “경영이 안정되면서 노사관계도 원만해지고 있다”며 “건설업과 시멘트사업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등 회사를 한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대시멘트, 협상타결 조업재개

(2004. 7. 19)

노사 협상결렬로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현대시멘트 충북 단양·영월공장 노조가 협상타결로 파업 18일만인 20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간다. 노사는 지난 18일 협상에서 임금 8% 인상, 현장수당 1만원 인상, 회사측의 복지기금 15억원 출연, 주 5일제 실시로 인한 4시간 감소 임금 보전 등 10여개 쟁점사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후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에서 86.8%의 찬성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20일 오전 8시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임·단협과 관련, 회사측과의 9차례에 걸친 협상이 결렬되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도 무산되자 지난달 28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파업을 결정한 뒤 2일 오전 8시부터 파

업에 돌입했다.

## 안후이콩치, 시멘트가격 20% 하락

(2004. 7. 27)

중국 굴지의 시멘트 제조회사인 안후이콩치시멘트는 5월과 6월 시멘트 가격이 1분기보다 20% 떨어졌으며, 이는 주로 중앙정부의 거시경제통제조치에 따른 결과라고 원웨이포가 보도했다. 신문은 회사 임원을 인용, 안후이콩치의 시멘트 가격이 6월에는 톤당 230위안으로 1분기보다 50위안 하락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4분기 경기회복과 함께 올해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의 222위안보다 10% 오른 244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자는 수건의 신규 시멘트 프로젝트가 정부의 경기과열억제책과 관련해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정책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올 하반기 완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생산목표는 4,000만톤으로 유지했다. 앞서 안후이콩치는 매출 증가 및 1분기 가격상승에 힘입어 상반기 순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배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 경기 광주, 레미콘공장 입지제한

(2004. 7. 28)

경기도 광주시는 환경오염 및 대형차 통행량 증가 방지 차원에서 8월부터 2007년말까지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또 기존에 등록된 공장이나 이미 신설·증설 승인을 받은 공장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환경친화적인 현대화시설로 개선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10개 레미콘·아스콘업체가 있으며 평균 가동률은 41%에 머물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비도시지역 기준지반고를 하향 조정해 자연부락에서의 주택신축 등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보전녹지에서 종교집회장과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장

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美, 주택건설 특수로 시멘트 부족사태 (2004. 8. 9)

주택건설 특수와 시멘트 수입량 부족으로 미국이 시멘트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왔던 미국의 시멘트 부족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9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건설 공기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시멘트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미국 50개 가운데 30개 주에서 시멘트 부족현상이 발생했으며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닉스와 같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극심한 시멘트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하지만 미국 동북부와 중서부 북부 일대에서도 시멘트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20% 정도가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부족은 지역적으로만 나타났지만 공급물량 부족사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나라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GCA의 켄 시몬슨 수석연구원은 “건축업자들이 시멘트 물량부족으로 건설공기를 제때에 못맞춰 일을 그만두거나 인원감축으로 정리 해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시멘트 부족사태는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 레미콘 공급중단 위기 (2004. 8. 9)

내달부터 수도권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도래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레미콘 공급중단사태는 지난 3, 4월 봄철 파동에 비해 후유증이 클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바닷모래 공급이 이달부터 전면 중단됨에 따라 여름

철 휴가가 마무리되는 내주부터 모래부족으로 인한 레미콘 제한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레미콘업계는 바닷모래 공급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해사의존도가 높은 인천 등 경기 서부지역의 레미콘공장을 중심으로 제한 출하가 시작되고 내달에 가서는 공급중단 사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레미콘 업계는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중순 이후 공사 성수기에 대비, 장마와 혹서기에 모래를 비축했으나 보름치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도 지난 7월말 수도권 서부지역 소재 레미콘공장의 비축모래 실태조사 결과, 보유 모래가 일주일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美, 시멘트 가격 최고 20% 상승 (2004. 8. 10)

수요 증가로 최근 미국내 시멘트 가격이 전년대비 최고 20% 상승했다고 CNN머니가 9일(이하 미국 시간) 보도했다. 포틀랜드시멘트협회(PCA)의 조사 결과 미국내 30여개 주에서 핵심 건설 원자재 가운데 하나인 시멘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가격이 최고 20%까지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요 증가와 건설붐이 시멘트 공급 부족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건설산업이 부정적 영향권 아래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미국의 건설 원자재 가운데 업체들이 설비를 완전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 각 지방서 주택건설 활기 (2004. 8. 10)

최근 북한 경제가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각 시·군에서 주택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다.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관교군에서

는 최근 대대적인 주택건설에 나선 결과 판교읍과 용흥리 등에서 1,400여 가구를 새로 건설했다. 판교군에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등 각종 건재생산을 선행하는 한편 '군(郡)도시건설대'와 '군농촌건설대', 각 기관 및 공장·기업소를 동원해 주택건설을 추진했으며 올해중으로 600여 가구를 더 건설할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강원도 문천시에서도 최근 살림집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시내와 농촌지역에 470여 가구를 건설해 제대군인 및 주민들에게 공급했으며 원산유리병공장 등에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유리 등 자재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자강도 강계시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1,4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건설에 착수했으며, 위원군에서는 올해 안에 460여 가구를 짓기 위해 '군살림집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현재 지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황해북도 연탄군에서도 이미 수백가구를 새로 건설했으며 양강도 김형권군에서도 읍내의 낡은 주택들을 헐어버리고 100여 가구의 아담한 주택을 건설중이다. 주택난 해소를 위한 지방의 주택건설은 최근 평양 도심의 영광거리 등 6·25전쟁 직후에 세워진 낡은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북한은 지난 10년간 농촌지역에서만 1,600여개의 마을을 새로 건설·조성하는 등 도시와 농촌 등 전국에서 총 45만 8,000여 가구를 새로 건설했다.

### 중국산 시멘트 몰려온다

(2004. 8. 20)

중국산 시멘트의 국내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시멘트업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말 현재 시멘트 수입량은 총 188만 1,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37.5%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시멘트 공급량 가운데 수입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4%에 달한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시멘트 수요는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수입 시멘트 비중이 지난해 2.96%에서 두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중

국은 그동안 건설수요 폭증으로 시멘트 수입국이었지만 최근 들어 생산 설비를 대폭 확충한데다 경기 억제책 발표이후 건설경기가 진정되자 남아도는 시멘트를 한국으로 밀어내고 있다. 중국 시멘트 생산량은 지난 연말 기준 11억톤으로 전세계 시장에 40%가 넘는 양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입장에서 한국은 첫번째 수출시장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시멘트업체들과 마찰을 빚어온 레미콘업체들이 중국산 시멘트 구입을 늘려가는 것도 한 수출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시멘트업체들로서는 시멘트대체체인 슬래그시장이 커지는데다 주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1년 사이 두배 가량 올라 원가상승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난해만 해도 '10년래 최대 호황'이라던 시멘트 경기도 완전히 꺾였다. 쌍용양회, 라파즈한라시멘트, 성신양회, 동양시멘트 등 대부분의 시멘트업체들도 매출 감소와 함께 영업이익 급감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쌍용, 페토너가루 대체에너지 활용

(2004. 8. 22)

국내의 대표적 시멘트 제조업체인 쌍용양회는 페토너카트리지에서 수거한 토너가루를 연소시켜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열에너지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쌍용양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열에너지는 유연탄이나 페타이어를 태워 나오는 열을 주로 이용했다"며 "하지만 페타이어는 부피가 커 이를 연소시키는데 소모되는 시설이나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최근에는 페타이어 물량까지 감소하고 있어 토너가루를 대체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1kg의 토너가루를 연소할 경우, 약 6,000kcal의 열량이 발생한다"며 "이는 같은 양의 페타이어를 태울 때에 나오는 열량(7,500kcal) 보다는 적지만, 토너가루가 페타이어에 비해 부피가 작아 연소시설을 소형화할 수 있는 등 전체적으로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 에

너지'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쌍용양회는 이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페타이어 연소시설 일부를 토너가루 연소시설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기존의 페타이어처럼 토너가루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라며 "충분한 양의 토너가루만 공급받을 수 있다면 언제라도 관련 설비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주택공급물량 7월까지 50% 감소 (2004. 8. 24)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주택공급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공급 목표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설교통부는 1~7월 전국 주택허가 물량이 총 18만 893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 7,226가구)에 비해 48.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1999~2003년)간 1~7월 평균 주택허가물량(26만 6,000가구)에 비해서도 29% 줄어든 것으로, 올해 주택공급 목표치인 52만가구의 36.6% 수준에 불과하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지난해 28만 1,227가구에서 올해 15만 159가구로 46.6% 줄었고, 다가구 및 다세대 등은 8만 5,999가구에서 3만 8,777가구로 54.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감소폭이 컸다.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지난해 동기대비 60.4% 감소한 반면 지방은 30.4% 줄었다. 이처럼 주택허가 실적이 감소한 것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와 원가연동제 추진 등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 동양, 폐열발전소 가동 (2004. 8. 26)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멘트 공장에 폐열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자체발전소가 들어선다. 동양시멘

트는 삼척공장에 229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대형 폐열회수발전소를 9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폐열회수발전소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고온의 열풍(Hot Gas)를 이용해 고온·고압의 증기를 생산한 후 이를 증기터빈 발전기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은 폐열발전소를 통해 매일 19.7MW의 전력을 생산, 연간 13만MW의 전력을 자체 공급할 계획이다. 삼척공장의 전체 전력 사용량 가운데 13.5%를 대체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60억원의 전력 대체효과가 발생하며 운영비를 연간 10억원으로 감안할 경우 매년 50억원의 제조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향후 4년만 발전소를 돌리면 투자비가 전액 회수되는 셈이다. 동양시멘트 폐열발전소 본격 가동을 계기로 다른 시멘트업체들도 폐열발전소 건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2002년 국가물류비 87조원 GDP의 12.7% (2004. 8. 27)

국가물류비가 GDP의 1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개발연구원은 27일 한국은행의 GDP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2002년도 국가물류비를 새로 산정한 결과 총 87조 320억원(기준기준 72조 7,61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의 80조 7,920억원보다 7.7% 증가한 것이다. 국가물류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2001년의 13%에 비해 0.3% 포인트 줄었다. 물류비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부문은 수송비로 전체의 72.7%인 63조 2,650억원이었으며 재고유지관리비도 20.4%(17조 7,930억원)를 차지했다. 이외에 스포장비(1조 8,170억원, 2.1%) △일반관리비(1조 4,150억원, 1.6%) △물류정보비(1조 3,930억원, 1.6%) △하역비(1조 3,480억원, 1.6%) 등의 순이었다. 수송비는 2001년(55조 160억원)에

비해서 큰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화물운송실적(8.8%)과 화물차량(8.1%)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부터 새롭게 발표하는 물류활성화지표 가운데 국내물류활동의 총부가가치는 48조 9,950억원(GDP의 7.2%)으로 총물류비 가운데 56.3%를 차지했다. 또 단위물류비(톤당 처리비용)는 5만 6,196원으로 추정됐다.

### 환경부, 백두대간 개발규제 대폭 강화 (2004. 8. 31)

내년부터 백두대간 지역에서는 국방·군사시설과 도로, 철도 등 공공사업만 허용되고 기타 광산 및 댐, 위락단지 등의 건설은 극히 제한된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백두대간보호법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31일자로 입법 예고한다. 이는 지난해 말 제정·공포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호지역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눠 각각 개발행위의 규제범위를 정했다. 또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사전협의의 범위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키로 했다. 단 광산개발의 경우 개발면적이 갱구와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진입로 등을 포함해 2만㎡ 미만의 경우만 채광을 허용키로 했으며 이를 완료한 경우 의무적으로 훼손지역을 복원토록 했다. 이 중 석회석 채광사업의 경우 올해말까지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받은 개발면적의 범위내에서만 채석이 허용되고 완료후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면 3만~30만㎡ 내에서 추가 채석을 가능토록 하는 총량제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와 산림청은 강원 태백과 평창, 전북 무주와 남원 등 각 지역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위, 법제처, 국무회의 등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산림청은 이르면 오는 11월 중으로 구체적인 백두대간지역의 핵심·완충구역 범위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수도권 민수 레미콘, 두자릿수 감소 (2004. 9. 4)

수도권의 건설경기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레미콘공업협회가 잠정 집계한 '올해 8월중 레미콘 출하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115개 레미콘 기업이 지난달에 건설현장에 공급한 레미콘량은 433만 8,000㎥로서 작년동기대비 7.7% 줄었다. 민간공사에 공급된 레미콘량은 388만 8,000㎥로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1% 감소했다. 이는 지난 7월중 감소폭인 24.0%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나 민간수요가 전체에서 90%를 점유, 절대수요를 차지한 사실을 볼 때 레미콘경기의 침체 장기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수원, 안양, 안산, 의정부 등 수도권 중심지와 서·북부권에서 수요감소가 두드러졌다. 안산·시화권은 작년동기대비 무려 67.8%나 감소했고 이어 △서울 중심권 -14.5% △안양권 -8.8% △경기 북부권 -8.1% △수원·화성권 -8.0% △인천 -6.7% 등이다. 반면 여주·이천권은 36.9%, 파주·고양권은 13.2%, 경기 동부권 5.3%씩 늘어 대조를 보였다.

### 콘크리트파일 40% 감소 (2004. 9. 6)

수도권 주택경기 급랭여파가 파일업계를 강타, 상당수의 고강도콘크리트 파일업계가 대규모 감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중 콘크리트파일(PHC) 생산이 23만 9,000톤으로 작년동기대비 39.1% 격감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로 감산폭이 심했던 지난 1998년(-47.7%) 이후 6년만에 기록한 최저 수준이다. 업계는 PHC의 급감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이 대거 연기된데 기인한다고 풀이했다. PHC는 지난 7월중 대규모 감산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뒷받침되지 못

하면서 누적재고량이 61만 3,000톤으로 한달 전에 비해 6.7%(3만 8,000톤) 증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PHC의 재고량은 건설업체가 무려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PHC업계 관계자는 “고강도콘크리트파일시장이 내수부진과 재고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속에서 ‘밀어내기식’ 출혈경쟁마저 가세,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면서 “PHC가격은 톤당 8만원 내외로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에 비해 20% 이상 하락,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업계관계자는 “PHC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지난달 감산에 착수했으나 판매가 부진, 향후 덤핑입찰이 재연될 소지가 높다”면서 “PHC업계가 원재료 가격폭등에 의한 원가 급등에다 판매부진,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외환위기때와 같은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공정위 과징금 ‘불공정’ 작년 패소율 55.6% (2004. 9. 7)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 비율이 지난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03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 결과 공정위가 패소한 비율(일부 패소 포함)이 55.6%를 차지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소송 패소 비율은 2001년 30.0%, 2002년 47.1%에서 지난해 50%를 넘어섰다. 최근 3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비율도 2001년 32.9%, 2002년 27.5%에서 지난해 43.2%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추상적으로 규정된 법령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고 문제가 되는 법조문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과징금 체납 가산금리가 연 14.6%로 증권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연 6%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가 상고한 사건이 지난해 한꺼

번에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패소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행정수도 84조 생산유발 (2004. 9. 9)

국내 건설공사 수주가 내년부터 연평균 4.7%의 성장을 지속해 오는 2010년에는 1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건설부문에서 41조원, 전산업에서는 84조 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고 건설 초기단계에서 기성액 추정치의 1.5%~2.0%에 달하는 추가수요가 발생하며 총 94만 2,000여명의 취업을 유발시켜 80만 6,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됐다.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마형렬)가 주최한 ‘건설경기 전망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건설산업 파급효과’ 세미나에서 건설산업연구원은 이같이 전망했다. 건설연은 건설수주가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및 기업도시건설, 뉴타운개발 등의 영향으로 중기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며 공중별로는 동북아중심지 건설과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도로와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토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신도시·행정수도·뉴타운 건설 등 신규 주택건설이 꾸준히 늘어나고 신청사 건립 등 건축부문의 수주도 활기를 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연은 일반 건설업체 전체 건설수주액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4.7% 증가해 오는 2007년이면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고 2010년에는 116조 6,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KDI 장기불황 우려 높아 (2004. 9. 9)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내놓은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IT부문의 생산증가율은 지난 7월말 현재 37.8%로 5월(68.1%)과 6월(53.9%)에 이어 계속 둔화,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

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반도체와 IT 부문을 제외한 산업생산은 6월 5.4%에서 7월에는 8.8%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출도 점차 둔화세가 가시화되고 있어 수출 증가율이 IT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3개월째 하락, 지난해 9월 이후 지속되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8월말 대비 30.5%로 7월(36.8%)보다 하락했다. 지난 4월 이후 급격히 상승한 국제 유가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급등은 생산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생산자물가를 상승시키고 교역조건 악화와 무역수지 흑자규모 축소라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월말 현재 석유제품과 중화학공업품이 내림세로 돌아서 수출단가는 5월(91.7%)보다 1.6% 하락한 90.2%를 기록한 반면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5월(106.9)보다 2.5% 상승한 109.3%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6월중 교역조건도 전월대비 4.1%가 악화됐고 2/4분기중에도 수입단가가 수출단가보다 더 큰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기대비 2.2%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 내년 예산 131조 5,000억원

(2004. 9. 10)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산업·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분야 등 내년 예산규모가 모두 2조 5,174억원 추가 증액된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예산당정협의를 열고 2005년 예산안(일반회계 기준)을 131조 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120조 1,000억원에 비해 9.5% 늘어난 것이다. 당정은 또 내년 예산집행을 위해 모두 6조 8,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증액된 예산 가운데 7,400억원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교육 및 보육분야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 및 중소

기업 혁신 기반을 키우기 위해서도 6,4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SOC분야에서도 4,700억원이 추가 증액된다.

### 민간연 “내년 성장률 4% 초반”

(2004. 9. 10)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9~5%, 내년도는 4%대 초반으로 예상하는 등 어두운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수출은 정보기술(IT) 경기 둔화로 하강하고 내수는 미미한 수준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는 상반기 5.4%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데 이어 하반기에는 4.6%, 내년에는 4.1%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10일 전망했다. 특히 연구원은 소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구당 부채 3,000만원, 신용불량자 문제, 고용구조악화, 소득양극화, 고정지출 증가 등으로 전체 소비회복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건설경기 또한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과 경기 위축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약세로 반전하면서 급강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와 LCD 등 주력수출품목의 성장둔화가 가시화되면서 IT산업의 투자 증가세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물가는 총수요가 부족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다 실업률은 고용창출력이 낮아져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올 상반기 5.4%보다 1% 가량 하락한 4.4%로 전망, 올 한해 경제성장률을 4.9%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4.5%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까지 전반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민간소비는 올 하반기부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 내년도 2.5%로 전망됐으며 내년도 건설투자, 설비투자는 각각 2.5%, 4.0%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올 상반기와 비슷한 3.6%, 소비자 물가는 3.4%로 내다봤다.



## “내년 경제, 건설에 달렸다”

(2004. 9. 11)

이현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 정도는 소비심리 회복과 4/4분기 건설경기 연착륙 여부가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건설경기의 연착륙 여부가 9월말부터 연말까지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며 “연착륙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다면 내년 상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지난 7월초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이 꾸준히 이뤄져야 하며 연간 50만가구 정도가 공급돼야 수급균형에 의해 급격한 가격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꾸준히 하고 수요를 건전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정책을 경기 활성화나 과열경기 수습을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많아야 하지만 투기적 수요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요층을 건전하게 바꿔나가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며 “주택의 소유제도와 임대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SOC사업 규제완화 나선다

(2004. 9. 16)

정부는 도로, 댐 건설 등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지원 아래 도공 등 6대 공기업 역시 내년 중 투자규모를 무려 4조 6,000억원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혀 건설경기 연착륙에 미칠 효과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뤄진 이해찬 국무총리의 공기업, KT, 포스코 등 CEO 릴레이 면담에서 공기업들의 이같은 방침을 전달받고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실은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이달초 발족한 총리실내 규제개혁위원회와 총리 직속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기업 투자증대를 위한 실질적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정실은 특히 국책사업이나 SOC사업 차질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다각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CEO 면담에 배석한 박종구 경제조정관은 “경영일선의 다양한 애로사항 및 정책대안이 건의됐고 정부차원에서 이들 공기업의 투자확대를 지원키 위한 다각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 민자도로 2~3개 우선 건설

(2004. 9. 20)

정부는 민간제안 15개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내달 중 제안서 보완·평가 등의 추진방안을 결정하고 수도권 장기 고속도로망 계획이 수립되는 내년초 2~3개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복합도시 개발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후 연내 1~2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 하반기 사업을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현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추진 상황, 최근 외국인투자 동향 및 전망 등을 점검하고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기술유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건설교통부가 보고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추진 상황에 따르면 15개 민자도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중 민자사업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서 보완·평가 등 추진방안을 결정하고 내년초 2~3개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SOC 재정사업에 연기금을 투입하기 위해 이달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사업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사업계획서

를 접수·평가한 후 내년 상반기 중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으로, 철도 등 교통시설 위주에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공공청사 등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하기 위해 최근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추가된 대상시설에 따른 시행모델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의 중장기 추진 과제인 기업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한 후 1~2개 시범사업을 선정, 내년 하반기 사업을 착수하기로 했다.

###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말뚝'

(2004. 9. 18)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걸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설목표인 10만호 가운데 지금까지 건설실적은 6,981호로 목표의 7%에 불과한 상황이다. 18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도권 6만 4,000호를 비롯해 총 1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9월 17일 현재 실제 건설실적은 6,981호에 불과했으며, 이는 목표 대비 7%만 건설된 셈이다.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힘들고, 택지지구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부처간·지자체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개발제한 구역 해제 예정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지만 지자체는 수익성 있는 시설의 입지만을 선호한다는 것. 특히 주민들까지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주변 지역이 슬럼화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시 이같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다. 이처럼 임대주택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정부는 연말까지 매월 '주택건설지원협의회'를 개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광역/기초)별로 국민임대 주택 건설실적 등 주거복지 지표를 연말에 평가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건교부,

### 공공주택 표준건축비 25.3% 인상

(2004. 9. 21)

건설교통부는 공공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그동안의 건축비 인상요인을 반영, 평당 229만원에서 288만원으로 평균 25.3% 인상한다고 밝혔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주택기금지원을 받는 18평 이하 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근거로 활용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조정된 표준건축비를 관보 고시일인 20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조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소형아파트에 대한 공사비 실사를 거쳤다"며 "실사결과 지난 2002년 12월 산정된 표준건축비 시행이후 올 6월까지 건설재료비 부문에서 10.8%, 노무비 및 기타비용 부문에서는 14.5%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철근은 중국의 건설수요 증가로 인해 고철값이 폭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골재는 수도권 모래공급의 95% 이상을 담당하는 웅진군 및 태안군의 바다모래 공급감소로 가격이 급등했고, 석유화학 제품이 많은 주요 마감자재도 유가급등으로 가격이 높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건설업체의 공공주택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건설물량이 지난 1999년 13만 1,000가구에서 작년엔 4만 8,000가구로 급감했다"며 "이번에 표준건축비가 대폭 현실화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공급확대와 품질향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